



한권으로 끝내는 언론분쟁해결 가이드북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구제절차



한권으로 끝내는 언론분쟁해결 가이드북

인 쇄 일 2020년 4월 24일

발 행 일 2020년 4월 29일

발 행 처 언론중재위원회

디자인·인쇄 (주)타라그래픽스

목차

• STEP 1

KEEP CALM AND CARRY ON (상황 파악하기)

- | | |
|------------------------------------|----|
| 1.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라 : '언론'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 08 |
| Case 유튜브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싶어요! | 09 |
| 2. 나의 '피해'는 무엇인가? | 10 |
| Case ID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 11 |
| 3.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 | 13 |

• STEP 3

신청 후 '프로세스' 파악하기

- | | |
|---------------------|----|
| 1. 신청서 접수 | 26 |
| 2. 심리 전 | 27 |
| Case 플랜B를 생각해야 할 때 | 28 |
| 3. 심리 당일 | 29 |
| Case 효과적인 언론대응의 중요성 | 29 |
| 4. 심리 후 | 31 |

• STEP 2

언론조정신청하기

1. 신청서 훑어보기 16
2. 청구권별 차이점 파악하기 18
 - Case “감옥이 됐다”는 사실 적시일까 의견 표명일까? 18
 - Case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절도범이라는 기사가 남아 있어요! 20
 - Case ‘도심 대낮 칼부림 사건’이 내 카페에서 일어났다고? 21
3. 신청서 작성하기 23

• STEP 4

어서와 조정은 처음이지? (조정심리기일 관련 Q&A)

- Case 기사가 삭제됐으면 좋겠어요! 35
- Case 잘못된 보도에 대해 사과 받고 싶어요! 36

• STEP 5

결과에 따른 사후 전략 구상하기

- Case 언론사와 사전협의를 가능하다면? 42



이 교재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교재활용법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댁니다.

나의 가족, 친구, 지인에게서 쉴 새 없이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야! TV에 너희 식당에서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이야?”

“◇◇야! ☆☆일보에 다정한 커플이라면서 네 사진이 올라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언니, 지금 인터넷 포털에 언니 이름이 나와요! 기사 보니까 커뮤니티에 언니 신상정보가 다 공개 됐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문도 모른 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쁜 식당으로 매도당했고, ◇◇씨는 멀쩡한 여자친구를 낚고 바람을 피는 사람으로 온 세상에 공개되었으며, □□씨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상이 공개되고 이를 기사화하는 언론에 의해 그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광경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언론피해, 여러분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본 교재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언론보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무엇인지,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이론을 단순히 설명하고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곁에 두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생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피해,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건 속 피해자가 '나'라면



활용 TIP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각 절차별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사례 속 피해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해 본다면, 절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여러분의 인격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앞으로 소개될 사례들은 실제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새로이 각색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의 당사자,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당사자 특징을 방지하지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삭제, 수정,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익명 처리를 A, B, C 등 알파벳으로 한 경우, 첫 글자를 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파벳 순서대로 처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언론분쟁해결 가이드북

STEP 1

KEEP CALM AND CARRY ON

상황 파악하기

1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라: '언론'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언론'이란?

- 사전적 정의: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
- 언론중재법상 언론: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가 가능한 대상(매체):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상 언론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추가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9년 법률 개정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네이버, 다음 등 포털)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 피해구제가 가능한 대상(매체)의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Q** 유튜브,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블로그나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왜곡된 언론보도를 퍼다 나를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한가요?
- A** 최근 기존 언론 못지않은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SNS, 각종 블로그나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보도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률상 피해구제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SNS 등에 잘못된 보도가 게재되어 있다면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 과정에서 유튜브 등에 게재된 보도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Case

유튜브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싶어요!

대학생 A씨는 SNS 활동을 즐기던 도중, 경기도의 한 지역이 벚꽃명소로 뜨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인생 사진도 남기고 주말 나들이도 갈 겸 해당 지역을 찾아가기로 했다.

A씨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즐기던 도중, B언론사에서 나온 기자라고 신분을 밝힌 C씨가 A씨에게 다가와서, “주간 SNS 명소로 선정된 곳에 실제로 온 소감이 어땠는지”, “주변에도 추천할 만한 곳인지” 등을 물어보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A씨는 잠깐 고민했지만 큰 언론사에 나의 인터뷰가 나온다면 SNS에서 유명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했었다.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 메인뉴스에 인터뷰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은 A씨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지인들에게 방송을 챙겨볼 것을 알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뉴스는 A씨의 기대와는 달라도 한참 달랐다. 「SNS 중독의 실태…벚꽃명소를 짓밟는 무책임한 시민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유명하고 화제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A씨의 인터뷰를 대표로 실어서 A씨를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이다.

게다가 이 뉴스는 포털사이트에 전송되어 많은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것은 물론, A씨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모욕적인 댓글도 상당히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B언론사의 공식 유튜브에도 기사가 업로드되어 높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A씨는 C기자가 취재의도를 숨긴 채 인터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원기사는 물론, 포털사이트 댓글, 유튜브 영상과 댓글 전부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A씨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사례 해결

A씨가 인터뷰를 수락한 것은 벚꽃명소에 온 소감에 대한 것이지, 자연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대표 자격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거나, 취재의도를 숨긴 채 인터뷰를 한다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A씨는 B언론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사수정을 통해 자신의 인터뷰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는 법률상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구제 대상이 되며, 원기사를 작성한 B언론사와 기사삭제로 합의할 경우, 해당 사항을 포털사이트에도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전송된 기사는 물론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까지도 삭제할 수 있다.

반면, 유튜브는 원칙적으로 현행 법률상 언론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이 있는 경우라면, B언론사와의 조정 과정에서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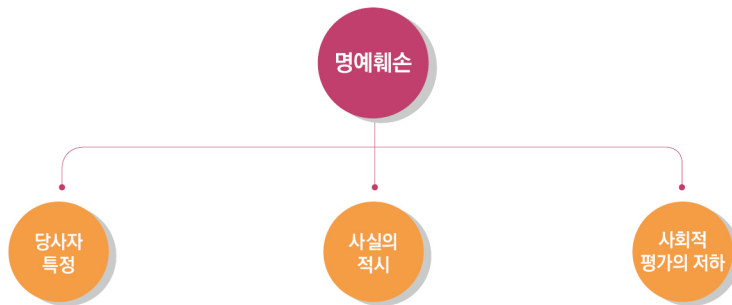
2 나의 '피해'는 무엇인가?

잘못된 보도로 인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로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특정+사실의 적시+사회적 평가의 저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Q 이니셜이나 가명을 쓴 경우라도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나요?

A 보도내용, 자료화면 등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실명이 아닌 이니셜이나 가명을 쓴 경우라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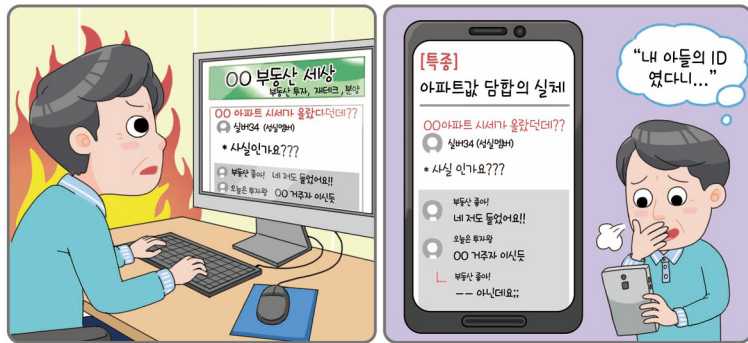
ID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A씨는 부동산 관련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집값을 올리려고 답합하는 세력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B씨와 시비가 붙어 댓글로 설전을 벌였다. C언론사 소속 D기자는 해당 커뮤니티의 글과 설전이 오고간 댓글의 내용을 캡처하여 '아파트값 답합의 실체'라는 주제의 기획기사에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 다음 날, A씨의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자신의 ID가 노출되어 네티즌 수사대의 표적이 되었고,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답합의 주범이라며 무차별적인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A씨가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아들 명의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쓴 댓글이 동의 없이 기사화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ID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어 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에도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A씨는 D기자를 상대로 자신은 답합의 주범이 아니고, 댓글 내용을 기사화한 데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ID를 공개함으로써 아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한 항의를 했다.

하지만 D기자는 해당 기사만 봤을 때는 ID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설사 누군지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의 기사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가?



• 사례 해결

비록 D기자가 A씨 아들의 ID만 노출시켰을 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SNS 등 온라인 활동을 하며 있어 동일한 ID를 사용했다면 ID 추적 등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도에 쓰인 자료화면과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아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이 A씨일지라도,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은 보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인 A씨의 아들이 해야 한다. (A씨는 직계가족으로서 아들의 대리인 또는 방청인의 자격만 인정된다.) 다만 아들이 미성년자일 경우, 조정신청은 법정대리인인 A씨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¹

사안의 경우, C언론사는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이유로 위법성 조각²을 주장하였는데, 설사 이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게시물 캡처 과정에서 ID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하여 당사자 특정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A씨와 아들은, “자신은 답합의 주범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해줄 것을 주장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기사 수정을 통해 캡처한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¹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3조

² 자세한 내용은 27p. 참고

Q 경기도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서울시민', '경기도민'과 같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인에 대한 비난 정도가 희석되므로 그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변 정황으로 보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기도 합니다.

Q 사실이나 논평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맛에 대한 평가, 외모에 대한 선호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견해가 담긴 사실이나 논평이 순수한 의견이나 해석에 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기초 사실을 근거로 사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침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음성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노출시키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 노출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3)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 등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자신의 사생활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로 영업장 매출 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나에게 피해를 준 대상이 '언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가 입은 피해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1) 해당 언론사와 직접 협의(담당기자, 데스크 등)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직접 연락하여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립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장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스킹(보도에 대한 사전 검토)'을 거쳐 이미 나간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등 내가 만족할만한 각종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사가 스스로 명백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 법원에 소송 제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단, 바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3심제를 도입하고 있어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기 어렵고 각종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인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신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절차는 아래와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과의 차이점	조정전치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기간(14일 vs. 3개월) · 해결방식(합의 vs. 판결) · 비용(무료 vs. 각종 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 · 동시 진행 가능 · '조정성립 → 소 취하' 전략 구사 가능
조정과 중재의 차이	조정신청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 · 중재 : 분쟁해결을 위원회의 결정에 맡김(당사자 간 중재합의 필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두 기간 모두 충족해야!



보도로 인한 피해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도로' 구제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용 없이, 합리적인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언론분쟁해결 가이드북

STEP 2

언론조정신청하기

1 신청서 훑어보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아래 샘플을 통해 신청서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조정신청서				
청구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정보도 <input type="checkbox"/> 반론보도 <input type="checkbox"/> 추후보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손해배상) 청 구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홍길동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3 100동 1234호	생년월일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단체고유번호	
	전화번호	010-0000-0000	E-mail	hgd@gildong.com
피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방송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갑을병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빌딩 15층	연락처	02-0000-0000
조정 대상	매체명		OOTV	
	보도일자			
	보도면/보도시간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닷컴의 경우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기재 요망		7시 저녁종합 뉴스	
	보도가 있음을 안 날 ♣추후보도청구인 경우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처분 사실을 안 날			
조정신청취지	※ 별 지 작 성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청구하는 보도문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배상청구액)			
조정신청이유	※ 별 지 작 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div>				
구비 서류: 조정대상 표현물의 사본 ※ 인쇄매체,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수수료 없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TV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 아래 정정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 “홍길동씨, 병역기피 의혹” 관련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홍길동씨, 병역기피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장관 후보자인 홍길동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홍길동씨는 지병인 허리 디스크로 인해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이며,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원을 지급한다.

언론조정신청서상 신청취지

신청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보도에 고의로 병역을 회피했다고 보도된 홍길동으로,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지병인 추간판 탈출증(이른바 허리디스크)으로 인해 병무청 신체검사결과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것으로 병역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장관 후보로 매도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해당 영상물 및 녹취록

2. 진단서

3. 병무청 확인서

언론조정신청서상 신청이유

2 청구권별 차이점 파악하기

언론중재법상 인정되는 4가지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청구권이 무엇인지, 청구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정보도청구 : 허위보도 바로잡기

언론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4조)입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모욕이나 비방에 해당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Case

“감옥이 됐다”는 사실 적시일까, 의견 표명일까?

A씨는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성실함의 표본과 같은 사람이다. 네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목표 하나로 생업에 몰두한 결과, A씨는 최근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A씨의 집 바로 옆에 공터로 있던 땅을 B씨가 매입하면서부터 불행이 찾아왔다. A씨의 집 왼편은 왕복 4차선 도로가 인접했기 때문에 그 구조상 대문과 창문을 오른편(공터 쪽)으로 낼 수밖에 없었다. 해당 공터의 전 주인은 20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B씨가 그 공터에 10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A씨 가족의 일조권과 조망권은 물론, 통행로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항의했으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B씨의 말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불법 건축은 아님) 그래서 최소한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만이라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묵살당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들이 쓰는 도로 쪽 창문을 대문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했다.

C언론사의 D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제보 받고, 추가 취재를 통해 『하루아침에 통행로가 사라지고 감옥이 되어 버린 집...그 사연은?』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를 접한 B씨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통행로가 사라졌다”거나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며 허위보도를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항의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D기자는 감옥이라는 표현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권리남용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따른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B씨는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사례 해결

B씨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씨가 대문과 창문 위치를 (B씨 건물 쪽으로) 선정한 것은 순전히 자신의 의사였으며, 다시 대로변으로 위치를 변경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통행로가 사라졌다”는 부분은 허위보도이다. (2) B씨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 어떠한 법적, 제도적 위반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런 상황을 “감옥이 됐다”라고 하여 마치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할 경우,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³ 이를 사안에 대입해보면, “통행로가 사라졌다”는 표현은 별도의 조치 없이는 출입할 마땅한 통로가 없고, 다른 출입문을 개방하더라도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보도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옥이 됐다”는 표현 역시 A씨의 의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했거나, A씨가 처한 상황을 C언론사가 평가한 것에 불과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C언론사의 보도는 B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소유권 행사의 한계(권리남용)에 대한 논의를 공문화하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보도의 내용이 B씨의 입장에서 다소 부적절하다는 암시를 줄 여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⁴된다고 볼 수 있다.

(2) 반론보도청구 : 편파보도 균형 맞추기

언론보도가 편파적일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가 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반론 또는 반박문 형태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6조)입니다. ‘사실적 주장’을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와 같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는 요구가 아닌,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 균형을 맞춰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추후보도청구 : 결백 입증 알리기

언론보도로 인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무혐의 처분 등)로 종결될 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7조)입니다.

³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⁴ 자세한 내용은 27p. 참고

• Case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절도범이라는 기사가 남아 있어요!

A씨는 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좋아하는 전복요리를 해주기 위해 근처 시장을 둘러 단골인 B가게에서 전복 5만원치를 구매했다. 가게를 나오면서 옆에 있는 C가게를 지나치던 A씨는, 훨씬 싱싱하고 상태가 좋은 전복을 3만원에 팔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산 전복을 꺼내어 C가게의 전복과 자세히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A씨를 본 C가게 주인은 A씨가 자기 몰래 전복을 훔쳤다며 A씨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B가게 주인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했고, B가게 주인도 A씨는 자신에게 전복을 샀다고 말했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결제 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B가게의 CCTV는 바로 전날 고장 나 수리를 맡긴 상태여서 A씨의 결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때마침 C가게를 들렀다가 상황을 지켜보던 D언론사 소속 E기자는 해당 사건을 기사화하기로 마음먹고 취재를 시작했고, 며칠 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를 절도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E기자는 「[단독] 21세기 장발장? 전통시장 내 전복 절도사건」이라는 제목으로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전복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도중 건너편에 있는 F가게의 CCTV를 입수했고, A씨가 B가게에서 5만원을 건네고 전복을 받은 장면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A씨.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여전히 전복을 훔친 '21세기 장발장'이라는 기사가 남아 있었다. A씨는 E기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E기자는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기사에는 허위가 없다면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해구제를 위해 주변을 수소문 하던 A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A씨의 명예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 사례 해결

E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는 A씨가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시점이었다. 즉 A씨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 단계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⁵

그럼에도 해당 기사는 제목을 「21세기 장발장? 전통시장 내 전복 절도사건」이라고 하는 등 이미 절도죄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도 A씨의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⁵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중 인격권 부분 발췌

처분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E기자가 속한 언론사는 추후보도를 해줄 의무가 있다.

만약 D언론사가 조정 과정에서 추후보도를 거부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소송까지 간다면 언론사로서도 추가적인 손실(소송비용, 손해배상책임 추가 등)을 부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에 비해 추후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은 높은 편이다.)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피해구제율	73.7%	71.4%	70.0%
추후보도청구 피해구제율	94.4%	99.6%	93.2%

(4) 손해배상청구 : 피해의 금전적 보상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8조)입니다. 통상 조정 과정에서의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소송과 달리 증거제출이 의무가 아니고,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이 요구되기에 언론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Case

‘도심 대낮 칼부림 사건’이 내 카페에서 일어났다고?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모처럼 시간을 내 가족들과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한창 즐길 무렵, 카페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사거리 맞은편에 있는 B카페에서 대낮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D방송사의 <저녁종합뉴스>에 ‘도심 대낮 칼부림 사건’이 소개되더니, 사건현장을 보여준다면서 B카페가 아닌 A씨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찍어 방송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모자이크 처리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상호와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카페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곧바로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곳이 A씨의 카페라는 댓글이 나오기 시작했고, “무섭고 흥흥해서 저 카페는 안 가야겠다”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A씨는 여행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카페로 돌아왔다. 아나나 다를까, 평소 손님으로 가득 차던 카페는 텅 비어 있었고, 오히려 실제 사건장소인 B카페는 손님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A씨는 곧장 D방송사로 연락해 항의를 했고, D방송사도 착오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성실하게 했고 영업상 피해가 자신의 방송 때문이라는 A씨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사례 해결

취재한 내용을 기사에 활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긴급한 사정 또는 공익을 위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특정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음성변조 처리 등을 확실히 하거나, 사후에라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사안의 경우 D방송사는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A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등 모자이크 처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A씨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조정 과정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로 감안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정은 소송과 달리 증거제출이 의무가 아니고, 손해 발생의 원인이 보도라는 직접적이고 상당성 있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D방송사를 상대로 보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권별 신청기간의 차이

청구권	신청기간
정정보도청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무혐의 처분 등)로 종결된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언론중재법 제 17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와 동일함. 다만 보도가 추후보도청구의 대상일 경우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무혐의 처분 등)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언론중재법 제 18조 제3항)

3 신청서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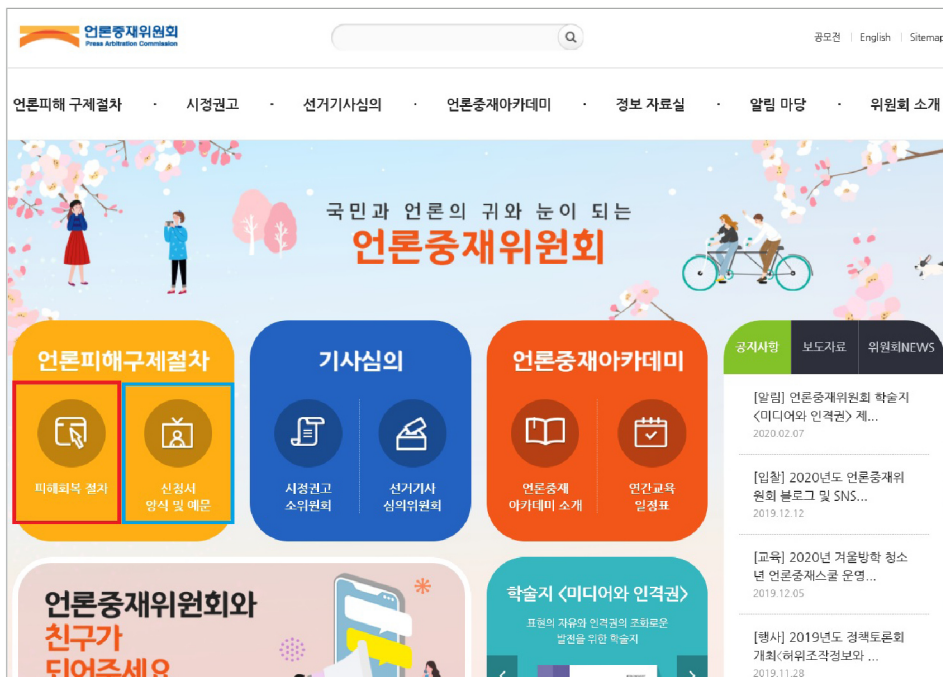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는 피해회복 절차에 대한 안내는 물론, 신청서 양식 및 예문을 신청인(개인, 단체, 복수, 미성년자)별, 청구별(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둘 이상의 청구 병합)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손쉽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전자신청시스템,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론피해 관련 상담을 원하시거나 조정신청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방문, 전화상담, 이메일 상담,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범위에 들어오는 매체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신청인’,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피신청인’이라고 부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 ‘피해회복 절차’와 ‘신청서 양식 및 예문’을 통해 언론피해상담과 조정신청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언론조정신청하기

언론피해 상담 및 조정/중재신청 방법

-

+

언론피해상담

직접방문	직접 방문하시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div>찾아오시는 길</div>
전화상담	- 접수상담팀 : 02) 397-3114, ARS 안내 시 1번 (언론피해상담), 또는 02) 397-3000, 3010, 3100, 3110, 3111 - 해당 언론사 주소제기와 지역사무소 <div>지역사무소 연락처 안내</div>
이메일 상담	counsel@pac.or.kr (이메일 전송후 위 상담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시간 상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을 위한 채팅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온라인상담 가능시간 : 평일 09:00 ~ 12:00 / 13:00 ~ 18:00) <div>1:1 실시간 상담</div>

조정/중재 신청 방법

전자우편에 의한 신청 (이메일)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전자신청시스템)	서면에 의한 신청 (우편 및 방문)
<div>■ 신청서(위원회 소정양식)를 작성하신 후, 상담/접수 전용 이메일(counsel@pac.or.kr)을 통해 제출</div>	<div>■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이용가능</div> <div> <div>전자신청</div> <div>나의 신청 조회</div> </div>	<div>■ 신청서(위원회 소정양식)를 작성하신 후,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div> <div>■ 직접 각성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위원회 상담전문 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진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구술 신청할 수 있음</div>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NEW 언론조정신청서 이렇게 작성해요!

NEW

언론조정신청서

작성예문

언론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을 참고하시어

언론조정신청서 예문

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1. 언론조정신청서 양식에 신청인의 연락처와 피신청인(언론사등)의 정보, 조정대상에 대해 작성한 후, 원하는 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조정신청취지)과 정정보도·반론보도·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조정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2. 조정대상 보도문(신문 등의 경우 기사의 전문, 방송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은 필수 제출사항이며, 필요 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작성하신 조정신청서는 이메일(counsel@pac.or.kr), 우편,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출하실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개인 신청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이나 사업자등록증(단체 신청인 경우)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론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조정신청서 예문(신청연별, 청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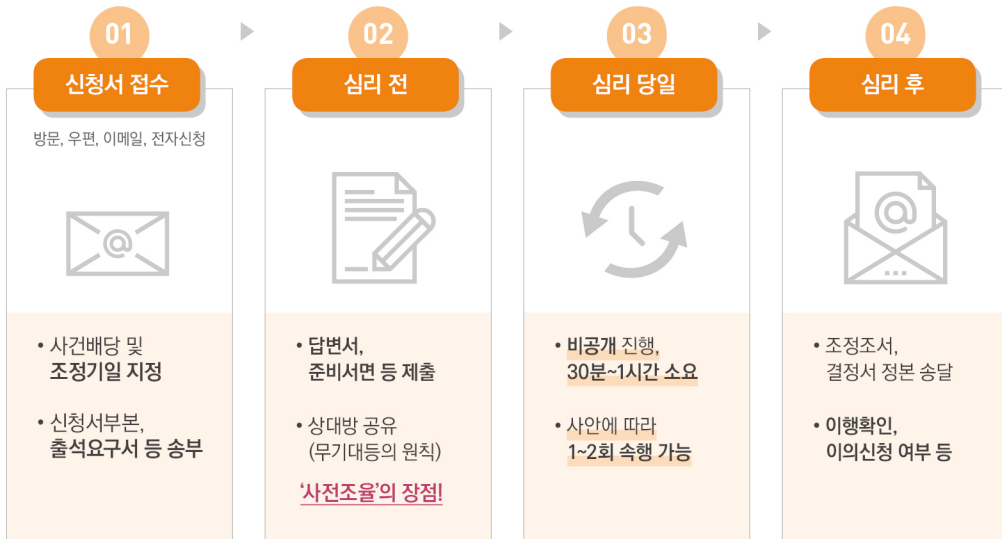
정정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신문 등 인쇄매체)	<div>다운로드</div>
	정정보도청구(방송)	<div>다운로드</div>
	정정보도청구(인터넷신문)	<div>다운로드</div>
	정정보도청구(포털사이트)	<div>다운로드</div>

유형별(신청인별, 청구별) 조정신청서 예문을 다운로드 받아 손쉽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STEP 3

신청 후
'프로세스'
파악하기

1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후 처리 과정

앞선 <STEP 1>과 <STEP 2>를 통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사건은 추첨을 거쳐 담당중재부로 배당이 됩니다.

중재부는 서울 8개, 지역 10개로 구성되며, 한 중재부당 5명의 중재위원(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 또는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재부별로 조사관이 1명씩 있는데, 조사관은 사건이 배당되면 조정기일을 통보한 후 양측(신청인, 피신청인(언론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며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때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의 부분 등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여 피신청인이 사건을 인지하게끔 합니다.

Q 조사관의 역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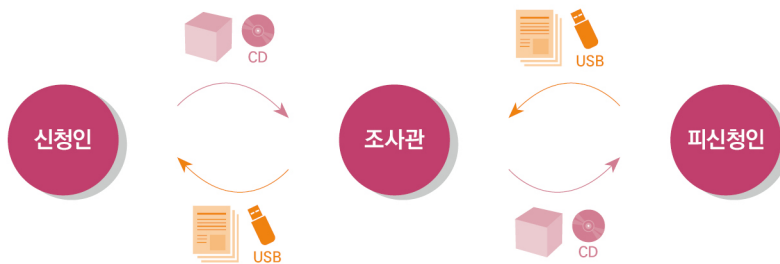
- ① 조사관은 중재위원들을 보좌하며 조정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처리를 담당합니다. 아울러 대립 당사자인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 쟁점을 정리해주는 등 사건을 보다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일 조정기일 출석 이전(심리 전)에 서로의 의사가 일치하여 사전조율이 가능한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타협점을 제안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 심리전

피신청인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며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신청인 주장이 일견 타당하지만 해당 보도는 공익성이 있고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러한 주장을 조사관을 통해 구두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심리가 개최되기 전까지 조사관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며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조정신청을 계기로 당사자 간 직접 협의에 나서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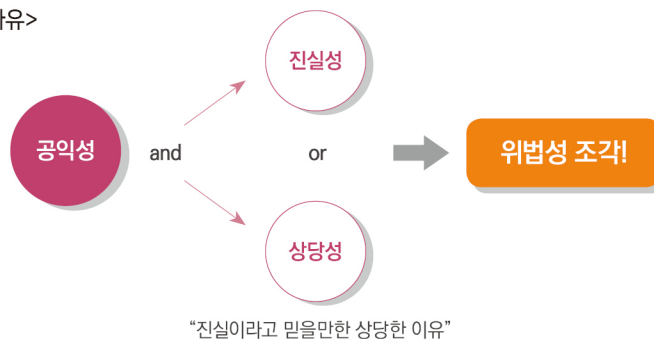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들은 시스템에 저장되어 하나의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되며, 일방이 제출한 것들은 예외 없이 모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양측은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조정기일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할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Q 피신청인의 주된 항변사유인 '위법성 조각(소멸)사유'란 무엇일까요?

A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론보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측에서 보도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보도'이거나, 보도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설령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 Case

플랜B를 생각해야 할 때

한 유명 커뮤니티에 [제보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언중제과>의 히트상품인 '어니콘' 아이스크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것이다. 증거 사진에는 반쯤 먹은 '어니콘'에서 벌레가 나온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해당 글은 화제의 글로 선정되어 순식간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고, 수많은 언론사에서 문의전화가 빙발쳤다. A씨는 <언중제과> 홍보팀장으로서 근거 없는 억측이 기사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혹보도'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언론사에서 이를 기사화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에도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A씨는 최초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네티즌 B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애썼지만, 최초 제보자인 B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소비자상담팀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는 평소에도 <언중제과> 제품에 대한 항의전화를 많이 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해 객관적 증명을 통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유통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갔는지, B씨가 악의적인 의도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도중 벌레를 넣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언중제과> 법무팀은 소송을 해서라도 B씨와 의혹보도를 한 언론사들 전부를 상대로 의혹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A씨는 진실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과 다수의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볼 것을 법무팀에 제안했다.

홍보팀장 A씨의 판단이 적절다고 볼 수 있을까?



• 사례 해결

신청인 <언중제과>는 억울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씨가 블랙컨슈머이기 때문에 고의로 벌레를 넣었을 것이다'라는 심증만 있을 뿐, 그러한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구제책은 정정보도일 것이다. 하지만 사안은 소송을 통해서도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다수 언론사와의 향후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홍보팀장 A씨의 생각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처럼 정정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소송보다는 신속한 해명보도로 독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끔 하는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중제과>는 해당 보도를 작성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조율로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담긴 반론보도를 게재해 줄 것을 제안한다면 적어도 '플랜B'로서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심리 당일



양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심리를 개최하는 모습

심리가 진행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한 사건 당 30분~1시간 이내입니다. 조정기일 출석요구서가 나가고 실제로 출석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물론 담당 중재부 역시 사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시간이 아닌 서로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조정은 1회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1)당사자 사이에 추가 협의의 필요성이 있거나, (2)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자료 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2회 속행을 통해 2차~3차 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사건 당사자 외의 입장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한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분위기의 진행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P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Case

효과적인 언론대응의 중요성

A씨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언론구청 도시발전과로 인사발령이 난지 막 3개월이 지난 부서 내 신입직원이 다. 업무 적응을 위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B언론사 소속 C기자의 전화를 받게 된다.

“안녕하세요, B언론사 사회부 C기자입니다. 현재 언론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청 실무자 D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부서인 도시발전과에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입장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A씨는 당황했다. 자신은 적응하기 바쁜 신입이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상급자에게 전화를 돌려주려 해도 마침 회의가 있어서 모두들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D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두려운 나머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만큼은 확실히 들어서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인사이동 등 사정이 있어서... 사건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건을 파악하는 중인 것 같은데요... 당시 담당자도 잘 모른다고 하고.. 확인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실례지만 성함과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기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메모한 뒤, 전화를 끊은 A씨는 비록 서툴렀지만 침착하게 대응한 것 같아 내심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C기자는 다시 연락을 주지도, 구청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C기자는 이미 취재를 통해 D씨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연중구청에서 자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A씨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단독] 연중구청,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의혹에도 '나몰라라'라는 제목으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다며 아래와 같이 A씨의 답변을 활용한 것이다.

구청의 담당 관계자는 “인사이동이 잦아 사건파악이 어렵다”, “해당 의혹에 대해 아직 누가 담당해서 조사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뉘앙스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A씨가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한 내용이 연중구청의 공식입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연중구청과 A씨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 사례 해결

C기자가 작성한 보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의혹보도이다. 그 내용 역시 (취재의 방법과 태도가 적절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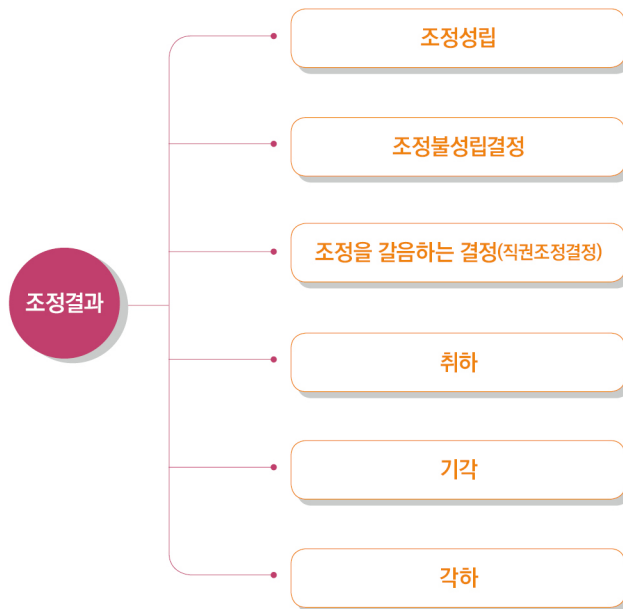
사안의 경우처럼, 이미 보도가 나갔고 정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보다 긍정적인 방향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막연히 손을 놓고 있다는 이미지보다는, 가령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파악 중에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다.”와 같이 최대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명보도를 통해 보강하는 것이 연중구청이 받은 피해를 뒤늦게나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심리 후

심리가 종결된다는 것은 조정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조정의 결과는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취하, 기각, 각하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해당 결과에 따른 조서나 결정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이 '정정보도'로 성립할 경우 그에 따르는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피신청인은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을 해야 하며, 신청인은 이행을 확인한 후 더 이상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P 4>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언론분쟁해결 가이드북

STEP 4

어서와 조정은 처음이지?

조정심리기일 관련 Q&A

Q 신청인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A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본인, 가족, 소속 직원(법인 등 단체가 신청인일 경우), 변호사는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신청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제3자가 신청인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재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Q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조정신청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신청과는 별개로 기자 개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다룰 수는 있습니다.

Q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 양 측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Q 기사삭제청구권은 없나요?

A 현행 언론중재법상 인정되는 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최근 이른바 '잊힐 권리'를 중시하며 '기사열람·검색 차단청구권'의 도입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과 달리 조정은 기존의 청구권으로 조정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청구에 대한 결론만 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로 합의할 수도 있고, 기사열람·검색 차단이나 기사 수정으로 합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청구권으로 조정신청을 한 후 당사자 간 의사합치를 통해 얼마든지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Case

기사가 삭제됐으면 좋겠어요!

A씨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있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용기 있는 여성들의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인권 보호 의식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용기를 낼 경우 회사 내에서 받게 될 불이익과, 신상이 공개될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곱지 않은 시선 등이 두려워 선뜻 행동에 옮길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직장 동료 C씨는 A씨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공익제보자로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원 비공개를 철저히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D언론사의 E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

그러나 E기자는 자료화면으로 쓴 사진에 회사의 이름을 노출시켰고, A씨의 성(박씨)이 흔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박모씨”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해당 기사로 인해 A씨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데에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름이 노출된 그 회사에 근무하는 박씨는 3명뿐이었고, 그 중에 여성은 A씨 한명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무리 ‘미투’ 운동이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 우려했던 2차 피해를 당한 점, 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본인의 동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기사의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E기자는 공익성이 있고, ‘미투’ 운동의 정당성 등을 근거로 설사 당사자 특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으며 A씨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의 기사였기 때문에 기사의 삭제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A씨의 인격권 침해 주장과 E씨가 항변하는 국민의 알권리, 공익 목적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하는 것일까?



• 사례 해결

‘미투’ 운동의 공익적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우선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기자는 공익제보자 C씨의 제보가 진실이고 추가 취재를 통한 자료 확보 결과 보도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인 A씨의 확인과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게다가 해당 보도는 A씨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과 A씨의 성(박씨)을 노출함으로써 당사자 특정까지 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A씨는 공개되길 원치 않았던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입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를 조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D언론사는 A씨와의 조정 과정에서 기사를 삭제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이미 나간 보도로 인해 A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으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Q 언론사나 기자의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A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희망하며 해당 언론사나 기자에게 사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언론사의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⁶

따라서 오보에 대한 피해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 법률상 인정된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유감표명 또는 사과문 게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Case

잘못된 보도에 대해 사과 받고 싶어요!

A씨는 광화문 광장을 지나던 도중 B언론사 로고가 붙어 있는 촬영용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와 카메라 간의 거리는 약 50미터 정도였는데, 갑자기 카메라 기자 C씨가 A씨를 향해 카메라를 고정시키더니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카메라의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촬영함을 인지함)

A씨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재빨리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C씨는 카메라를 끄고 다른 곳을 찍기 시작했다. 그래서 A씨는 자신을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날 저녁, A씨는 식사를 하며 뉴스를 보다가 「얼어붙은 경기, 행인들 행색도 초라해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화문 광장을 지나던 자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고스란히 나가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동의 없이 초상이 노출된 것을 넘어서, '행색이 초라한 행인'의 한 예시로 자신이 표현되었다는 점에 화가 난 A씨는 C기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손해배상과 함께 공식사과를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C기자는 A씨가 손을 흔드는 것을 '촬영을 허락한다'는 의미의 반가움을 표시한 행동으로 이해했다고 항변하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해석의 차이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1회성 방송에 그쳤고, 시청률도 낮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한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사례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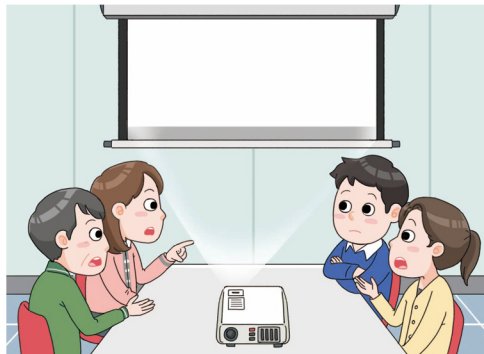
A씨가 손을 흔드는 것의 의미를 C기자가 잘못 해석해서 발생한 경우로, 초상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물론 C기자의 입장에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행색이 초라한 행인’으로 A씨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행동을 통한 묵시적 동의를 받기보다는 구두 또는 서면 형태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보다 적절했을 것이다.

따라서 B언론사는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A씨의 초상을 사용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A씨가 받기를 원하는 공식사과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B언론사가 도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인 유감표명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액수를 참작하고 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중재부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제한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피력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사진과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빔 프로젝터를 통한 구현이 가능합니다.



Q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조정은 소송과 달리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심리에 임해야 합니다. 대화와 설득, 양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Q 그 밖의 유의사항이 있다면?

A 심리를 통해 조정이 성립할 경우,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양측이 최종 서명을 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반복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합의서상의 이행 조항(보도일시, 보도방법, 보도문의 내용, 이행강제 등)들을 확인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조 정 합 의 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서울조정2021·2022(정정·손배)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 「홍길동 장관 후보자 병역기피 의혹」 관련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4일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홍길동 장관 후보자 병역기피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장관 후보자인 홍길동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홍길동씨는 지병인 허리 디스크로 인해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이며,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년 12월 5일까지 ○○-TV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제1항의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은 20◇◇년 12월 5일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 11. 28.

신 청 인	홍길동	_____
피신청인 대리인	방송용	_____
조 사 관	조정해	_____

STEP 5

결과에 따른
사후 전략 구상하기

STEP 5 결과에 따른 사후 전략 구상하기



조정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게 된 경우입니다. 합의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양측은 합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이행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조정불성립결정

당사자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등 조정을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은 조정과는 별개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을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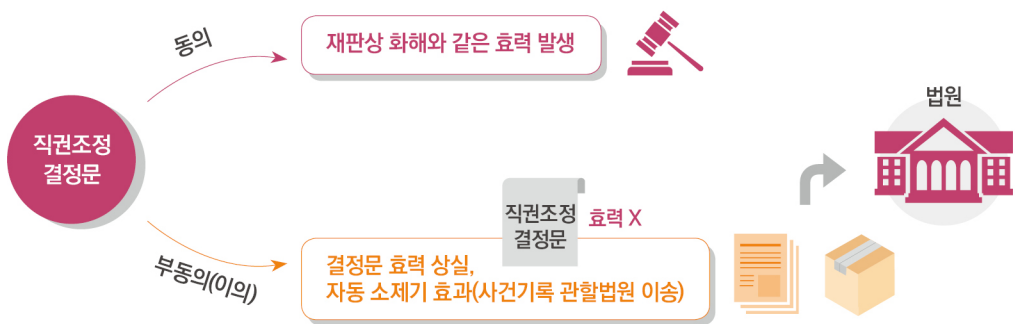
비록 당사자 간에 임의로 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재부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 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직권조정결정문을 받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과 달리, 해당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권조정결정을 하게 되면 양측에 해당 결정문을 송달하고, 각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7일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해당 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결정문 내용에 따른 이행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한쪽이라도 결정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결정문의 효력은 그 즉시 상실되고, 담당중재부는 조정신청사건의 모든 기록들을 편철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양식을 통한 서면접수만 가능하며, 사건기록을 받은 법원은 신청인에게 '원고'가 되기 위한 각종 절차진행 및 비용납부(보정명령 이행, 인지대 납부 등)를 요청하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즉,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하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하는 심리가 개최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심리 도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취하는 조정 과정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사전에 종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정 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곧바로 소송을 가기로 하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Case

언론사와 사전협의가 가능하다면?

A씨는 5년 전, 제주도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려견 ‘똥이’를 입양해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에서 “불이야!”라는 소리가 나서 마당으로 뛰쳐나가 보니, 바로 옆집이 큰 폭발음과 함께 불타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불은 담장을 넘어 A씨의 집으로 번지려 했고, A씨는 다급한 마음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똥이’를 구하기 위해 마당에 있던 ‘똥이’의 목줄을 풀어 안전한 곳으로 함께 대피했다.

화재는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출동으로 곧 진압됐고 다행히 A씨의 집까지 번지지지는 않았으나, 마당에 있는 정원이 불타고 ‘똥이’의 집 주변이 검게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A씨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과 취재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시달리게 되자, 급한대로 ‘똥이’를 목줄에 묶어 잠시 마당에 놔두기로 했다. 다음 날, B언론사는 「목줄이라도 풀어주지...화재로 까맣게 그을린 강아지의 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A씨의 집 마당과 목줄에 묶여있던 ‘똥이’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노출시켰다. 설상가상으로 기사의 본문은 화재가 나자 반려견을 버리고 도망가서 강아지가 위험에 처할 뻔 했다고 하면서, 애완동물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주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자신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을 쓴 기사로 인해, 반려견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오인 받아 주위 사람들은 물론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주변에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고, 지인으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관을 소개받아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 해당 기사를 썼다는 C기자로부터 “취재가 충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A씨는 B언론사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과 함께 혹시 추가적으로 왜곡된 보도를 쓰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사례 해결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집과 반려견이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취재로 인해 '반려견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주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B언론사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힘에 따라, A씨는 굳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여 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A씨는 언론사와의 직접 협의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중재부의 조사관은 양측의 입장을 중간에서 잘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로써 A씨는 굳이 심리에 출석할 필요 없이 언론사의 사과가 담긴 정정보도를 게재해주는 것을 확인한 후, '취하'를 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각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아이돌에 대한 보도에 대해 팬클럽 일부가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거나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 사유가 됩니다. 또한,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경우,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각하

중재부는 조정신청에 있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정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으로 정해진 조정신청기간인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망자 명의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유튜브처럼 '언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치 및 연락처 안내

서울 사무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 397-3114 ※상담전화: 02) 397-3000, 3010, 3100, 3110
	FAX	02) 397-3089
부산 중재부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6층 (우) 48223
	전화	051) 759-7083~4
	FAX	051) 759-7093
대구 중재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1402호 (우) 41256
	전화	053) 763-0020~1
	FAX	053) 763-0242
광주 중재부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5층 (우) 61947
	전화	062) 676-0360~1
	FAX	062) 676-0362
대전 중재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MBC 8층 (우) 34125
	전화	042) 525-0778~9
	FAX	042) 525-0768
경기 중재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우) 16488
	전화	031) 211-9027, 9022
	FAX	031) 212-0223
강원 중재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우) 24270
	전화	033) 255-2878~9
	FAX	033) 255-2872
충북 중재부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우) 28625
	전화	043) 286-8083, 8081
	FAX	043) 286-8084
전북 중재부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3가) 405호 (우) 54969
	전화	063) 288-0010, 0981
	FAX	063) 288-0980
경남 중재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우) 51457
	전화	055) 263-1787, 1780
	FAX	055) 263-1769
제주 중재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현곡빌딩 4층 (우) 63223
	전화	064) 722-3328, 3352
	FAX	064) 726-3201

언론중재아카데미 안내

언론중재아카데미에서는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과 전문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교육팀 02)397-3062~7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교육대상 · 언론사, 대학,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단체 등
교육내용 ·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례, 언론분쟁 해결방안, 언론조정·중재 절차 소개 등
교육시간 · 2시간(1~3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교육장소 · 해당 기관의 강의실, 회의실 또는 위원회 강의실 등

전문연수 프로그램

교육대상 · 공무원, 기업 임직원, 언론인, 예비 법조인, 일반인, 대학생 등
교육내용 · 대상별 분쟁해결 전략 및 언론대응 역량강화, 언론조정·중재 절차 소개 등
교육기간 · 1~10일(과정별로 상이)
교육장소 · 위원회 강의실(서울, 부산, 광주) 등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교육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내용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및 진로 탐색
교육시간 · 2~3시간
교육장소 · 위원회 강의실(서울, 부산, 광주) 등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 신청방법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ac.or.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